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용어

정책제언 I

道 관광객 증가, 경제 위기 돌파구 삼아야 한다



강원도민일보 오피니언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강원관광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강원도관광재단의 ‘강원도 관광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강원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총 3,594만명으로 1년 전 3,186만명에 비해 408만명(13%)이 더 찾았다.

올 1, 2월에는 전년 동 기간 대비 각각 68만명(6%), 149만명(15%)이 늘어난 1,262만명, 1,118만명이 방문했다. 3월에는 전년 대비 191만명(19%)이 늘어난 1,215만명이 강원도를 찾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관광 수요가 폭발하면서 겨울축제 재개와 겨울 레포츠 관광 방문, 봄나들이객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5월에도 양구 공취축제, 원주 한지문화제, 춘천 마임축제 등 다양한 지역 축제가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어서 외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1분기 외국인 관광객은 4만2,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000여명의 3.6배로 큰 폭의 증가세다. 해외 단체 관광객들의 복직이는 모습에 관광업계의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20만명으로 2021년 96만여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아졌다.

외국인 관광이 완전히 회복했다고는 할 수 없어도 오랜 기간 침체에서 벗어나 새롭게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관광산업은 코로나 직전인 2019년 세계 GDP 기여도가 10.4%에 이른다. 제조업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최소 2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다. 청년층 취업 비중이 다른 분야보다 두 배나 큰 것으로 평가된다. 굴뚝 없는 하이테크산업으로 미래 일자리 창출의 산실로 촉망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관광은 팬데믹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분야다. 따라서 강원관광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관광산업은 지방소멸, 청년일자리, 탄소중립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미래산업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빠른 시일 내 견어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데이터융복합·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여름휴가 여행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휴가 기간 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3위에 그쳤다. 부족한 쇼핑 콘텐츠, 비싼 물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관광은 종합산업이다.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엔데믹 시대의 강원관광 활성화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국내는 물론 세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출처:강원도민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 II

5년 안에 일자리 23% 바뀐다”...‘AI발 고용태풍’ 대책 세워야



동아일보 오피니언

인공지능(AI) 등의 등장으로 2027년까지 기존 일자리의 23%가 구조적 변화를 겪는 등 글로벌 고용시장이 요동칠 것이라고 세계경제포럼(WEF)이 전망했다. 일자리 8300만 개가 사라지는 데 비해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6900만 개에 그쳐 1400만 개가 줄어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술 혁신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먼 미래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WEF가 45개국 80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작성한 ‘2023년 미래 직업 보고서’는 비서, 은행 창구 직원, 계산원, 매표원 등의 직업이 AI의 등장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봤다. 최근 IBM은 인사·총무 등 경영지원 직군의 30%를 AI로 대체할 수 있다며 채용 중단을 시사하기도 했다. 반면 빅데이터 분석, 정보보안 등의 분야에선 2027년까지 고용이 30% 증가할 것으로 WEF는 예상했다. 위협과 가능성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제대로 준비해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AI발 일자리 태풍이 현실로 다가왔지만 한국은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도태 산업에서 성장 산업으로 사람과 돈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경직적이다. 해고와 재취업이 어렵고, 근로시간과 근무 형태가 획일적이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내걸었지만 첫 단추인 근로시간 개편조차 아직 끼우지 못했다. 낡은 교육 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은 구직난을 호소하는데 정작 기업들은 신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찾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AI로 대표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다. 적응하지 못하면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도태될 수밖에 없다.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동과 교육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들이 신산업 시장에서 마음껏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AI로 일자리를 위협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재교육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태풍이 다가오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

출처: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용어

정부동향

국민권익위원회

사실혼 배우자 20년간 간병...주민등록지 달라도 임대주택 승계 허용해야

- 국민권익위, 사망한 임대주택 임차인과 함께 거주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하도록 의견표명 -

- 사망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함께 임대주택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배우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령에 장애가 있는 임대주택 임차인을 간병하며 실제 함께 거주해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임차인 사망에 따른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하도록 ○○공사에 의견표명했다.
- 고령에 장애가 있는 ㄱ씨는 ○○공사가 공급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으로, 전 배우자가 일찍 사망해 딸 ㄴ씨를 홀로 양육해왔고, 2003년부터 사실혼 관계인 ㄷ씨의 간병 도움을 받으며 임대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사망했다.
 - ㄴ씨는 ㄷ씨가 임대주택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사는 ㄷ씨의 주민등록이 달라 함께 거주했다고 볼 수 없어 승계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
 - 이에 ㄴ씨는 “ㄷ씨가 ㄱ씨를 간병하며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했으니 승계를 허용해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ㄷ씨가 신장 및 시각 장애를 가진 ㄱ씨를 간병하며 2013년부터 주3회 투석치료에 계속 동행하는 등 배우자로서 헌신적인 역할을 했으며, ㄴ씨에게도 아버지로서 결혼식에 참여하는 등 항상 고마운 역할을 해온 것을 확인했다.
 - 또한 택배 배송내역, ㄴ씨의 결혼식에 아버지로서 참석해 사진을 촬영한 점, 이 민원 임대주택 경비원과 같은 동 주민의 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 ㄷ씨가 주민등록만 달리했을 뿐 실제 임대주택에서 ㄱ씨와 함께 거주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 아울러 주거를 독립한 ㄴ씨가 어머니 ㄱ씨 명의의 임대주택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기할테니,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고령에 다른 주택을 마련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아버지 ㄷ씨에게 임대주택을 승계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호소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사에 ㄷ씨에게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하도록 의견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이상돈 고충민원심의관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임차인 사망 시 실제 사정을 살펴서 관련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복잡한 지하상가, 실내내비게이션으로 쉽게 찾는다

- 지하상가, 지하철 역사 등에 주소를 부여하여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실증 -
- 가로등 · 전주 등 도로시설물, 항 · 포구 및 강 안의 시설까지 주소부여 -
- 생필품 드론 배송 등 국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주소정보 서비스 모델 발굴 -

< 「실내내비게이션」 적용 사례 >

ㄱ씨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을 자주 이용하지만 방문 할 때 마다 길을 헤맨다. 앞으로는 실내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목적지까지 가는 보행길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 복잡한 지하상가, 헛갈리는 지하철 역사 등 실내에도 주소가 부여되어 길찾기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는 주소체계 고도화와 주소기반 신산업 모델 개발을 선도할 지자체 25곳을 선정하고 국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주소정보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선정된 25곳의 지자체는 2월(2.1.~2.17.)에 시행된 2023년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 선도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 공모에는 85개 지자체가 응모하였으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우수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했다.
 - * 1차 서면심사 2.22., 2차 자문컨설팅 3.28.~3.29
- 이번 전국 확산을 목표로 시행되는 주소정책 선도사업은 국비지원 사업과 지자체에서 시범운영되는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용어

- 국비지원 사업에는 20억 7천만 원이 투입되며 17개 지자체에서 ▲주소기반 드론 배송, ▲주소기반 로봇 배송, ▲자율주행차 주차 인프라 구축, ▲대규모 판매시설 주소 세분화, ▲주소정보시설 테스트베드 등이 시행된다.
-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12억 원 규모로 8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되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실증, ▲항·포구, 강 내 시설 주소부여, ▲사물인터넷 기기에 주소적용 및 지능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도로시설물에 주소정보 적용, ▲지하시설물에 주소정보 적용, ▲시간개념*(한시운영) 사물주소 시범구축 등이다.
 - * 거리공연장, 야외장터, 푸드트럭, 배달존 등 일정기간, 일정시간에만 운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물에 부여하는 주소
-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주소체계를 고도화하고 주소정보 기반 산업모델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을 공모를 통해 진행해왔다.
 - 특히,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농어촌 지역 도로명 확대, 주소기반 드론 배송 등을 통해 국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새로운 주소정보산업 생태계를 조성했다.

주소체계 고도화

비닐하우스·농로 등 농촌지역, 해수욕장·항만 등 어촌지역 도로명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시설 설치(경남 의령, 거제) → 주소사각지대 위치정보 제공, 농작물 직거래 및 택배 시 위치 안내

대규모 판매시설(농수산물 도매시장) 주소 세분화(인천 남동구) → 소상공인 사업장 주소 부여를 통한 점포별 위치 안내 및 택배 배송 가능

출입구 정보 확충 기준 마련(경기도) → 건물 주출입구 외 보조출입구(고령자, 휠체어, 유모차 등 이용) 구축 및 가까운 출입구 길 안내를 위한 기준 마련

주소기반 신산업 모델 개발

주소기반 드론(가평, 영월), 자율주행 로봇 배송(부산, 세종, 울산, 송파), 자율주행차 주차(세종) 실증 → 주소기반 드론배달점을 활용하여 편의점 ↔ 펜션 간 물품 배송 등 주소기반 산업모델 개발·보급을 통한 상용화 기반 마련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실증(대전 유성) → 백화점 실내 공간에서 주소, 매장 이름 등으로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실내내비게이션 서비스 실증

-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주소정보를 확충해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소기반 신산업 서비스를 적극 개발·보급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신중년 재취업, ‘이것’ 통해 성공했다

- 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 평균 취업률 57.5%로 안착 -

- 올해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2,500명 교육 -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이 올해 2,500명 신중년 취업준비생의 재취업 지원에 나선다.

□ 지역산업 ‘빈 일자리’ 공략해 중장년 재취업 견인

- 정홍주(49·남) 씨는 사천에서 20년간 학원을 운영하다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하면서 2년 전 학원 문을 닫았다. 낯선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부담감, 어린 학생들과의 세대 차이로 고민이 컸던 터라 결국 사업을 접었다.
- 정 씨는 1년여간 마땅한 일을 고민하다 직업훈련으로 눈을 돌렸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하루 6시간씩 폴리텍 항공캠퍼스에서 ‘항공기 기체 제작’ 신중년특화과정 교육을 받고 재취업에 성공했다. 정 씨는 현재 항공기 부품 표면처리 기업 품질관리 부서에서 검사직으로 일하고 있다.
- 정 씨는 “검사직을 하려면 도면 해독이 능숙해야 한다”라면서 “항공기 부품은 L(왼쪽), R(오른쪽) 구분이 어려운 게 많은데, 폴리텍에서 교육받고 어려움 없이 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할 곳이 있다는 사실에 보람차게 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항공캠퍼스의 이 과정에는 정 씨처럼 수료 후 재취업에 성공하는 교육생이 늘고 있다. 취업률은 2021년 78.9%에서 2022년 81.8%로 높아졌다.
- 항공기계과 정화(47·남) 교수는 “청년들이 제조업과 지방 소도시를 기피하는 데다 코로나19로 항공산업이 쇠퇴하고 있던 낙인까지 더해져 항공기 부품 제조업계는 일손이 없어 고민”이라면서 “중장년을 대상으로 부품 가공, 조립 등 핵심 실무기술을 가르쳐 인력이 필요한 지역 기업체로 재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또 “최근 여객 수요가 회복되고, KF-21·FA-50 양산에 대비하면서 기업체로부터 구인 의뢰가 꾸준하다”라고 덧붙였다.

- **자격증과 실무교육 발판 삼아 새 출발… 취업률 57.5%**

 - 정 씨와 같이 다시 일하고 싶은 중장년이라면 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에서 새 도전을 시작할 수 있다.
 -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의 전직, 재취업을 돕는 직업훈련과정이다. 교육기간은 3~6개월로 교육과정 대부분이 △설비관리, 건설기계 등 자격 취득에 따라 재취업이 용이한 직종 △용접(울산), 패션(대구) 등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직종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2,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 신중년특화과정은 자격 취득과 실무교육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있다. 경력 등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라는 게 폴리텍의 설명이다.
 - 일례로 남인천캠퍼스 ‘전기시스템제어’ 과정은 교육생들이 최근 2년 연속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100% 취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스마트전기와 김홍용(46·남) 학과장은 “필기시험 합격률이 평균 30% 초반*임을 고려하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재취업에 대한 열의가 대단해 국가기술자격을 두 종목 이상 취득하는 교육생도 60%가 넘는다”라고 설명했다.
 - * 필기시험 합격률(출처: Q-Net 전기기능사 검정 현황): 2021년 34.3%, 2022년 33.5%
 - 또한, 폴리텍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수료생 중 절반 이상(57.5%)*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지난해 과정에 참여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7.35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057점 상승한 수치다.
 - * 2020년~2021년, 2022년 상반기 수료생(3,485명) 대비 취업자(2,004명) 비율
 - ** 기획재정부 주관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한편, 신중년특화과정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kopo.ac.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캠퍼스별로 모집 과정과 일정이 상이하다.
-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는 “일하고 싶은 중장년의 직업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작년부터 훈련 인원을 기존 1,500명에서 2,500명으로 크게 늘렸다”라고 설명했다.
- 임 직무대리는 “산업·인구구조 등 노동시장 여건 변화로 중장년층 일자리 이동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신중년특화과정을 통해 재취업 역량을 갖추고, 다시 한번 사회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길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정책브리프

지방행정통계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김 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01.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제도 관련 통계 지표 연구 필요성

- 최근 지역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지방 통계 지표의 수요가 증가함
 - 지역통계의 전통적 정의는 '지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하여 지역 분석 및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 집행, 관리, 평가를 목적으로 지역단위의 공간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생산하는 통계'를 의미하지만(김정민, 1995), 최근 경제 성장 외에도 지방분권·지방민주주의·지역 다양성 등이 중요해짐에 따라 본 고는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이하 지방통계 혹은 지방행정통계)'라는 용어를 사용함
- 현재 지방행정통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
 - (지표 생산 부족) 광역 단위의 공공행정 데이터는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기초단위의 지표가 양적으로 부족함
 - (지표 가공 및 유통 부족) 광역 단위의 데이터에 본청과 시·군·구를 구분하여 제시하거나, 개별 시·군·구 목록화 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는 생산되지만, 최종 지표체계로 산입되지 못한 경우가 존재하여 효율성이 떨어짐
 - (지표체계의 통일성 부족) 주로 지표 가공 및 유통 부족의 문제로 인해 문서 형태(PDF 등)로 존재하거나 개별 지자체 홈페이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데이터가 'e-지방지표'등 통계 플랫폼으로 흡수되지 못함
- 지방행정통계지표의 현황에 대하여 ①통계를 제공하는 통계 플랫폼의 적절성, ②시도·시군구·읍면동 등 통계 지표 제공 범위 현황 파악 ③EXCEL, CSV 등 가공가능한 통계 지표 제공 유형 분포 파악, ④통계의 신뢰성 및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승인통계 제도의 활용 정도 등이 쟁점으로 부각됨

02.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제도 통계 현황 및 문제점

통계 지표 현황

- 지방행정통계지표는 크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및 「지방자치법」을 따라 분류할 수 있음
 - 자치입법권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을 자주적으로 정립하는 권리로, 헌법 제 117조 1항에 근거
 - 자치조직권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구·정원·보수·사무 분장 등을 조례 또는 규칙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정하는 권리
 - 자치행정권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안전과 사회·경제질서의 유지, 생활환경의 정화 등을 위해서 자기 사무를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
- 현재 통계청, 행정안전부, 교육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통계플랫폼을 통하여 수집가능한 지방행정통계지표 수는 총 359개로, 자치입법권 100개, 자치조직권 220개, 자치행정권 39개로 추산됨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용어

• 지방행정 관련 통계지표 현황 : 각 카테고리별 지표 수 •

자치권	대분류	지표 수
자치입법권	주민	32(32.0%)
	조례와 규칙	2(2.0%)
	선거	9(9.0%)
	지방의회	57(57.0%)
	소계	100(100.0%)
자치조직권	집행기관	111(50.5%)
	인사관리	109(49.5%)
	소계	220(100%)
자치행정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27(69.2%)
	지방자치단체 기능과 사무	4(10.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8(20.5%)
	소계	39(100%)
지표 총 합계		359

통계 플랫폼 현황

- 통계청의 'e-지방지표', 'e-나라지표', 행정안전부의 '행정안전통계', '내고장알리미', '지방재정365',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 교육부의 '교육통계서비스',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시스템, 대한민국시도의회장협의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의 통계플랫폼에서 지방행정통계를 운영하고 있음
- 다양한 통계 플랫폼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허브 플랫폼의 역할을 위해 공공데이터 포털을 운영하였으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보임
- 관련 플랫폼이 통일성 없이 난립하고 있으며 각 플랫폼은 복수의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지방행정 통계지표를 찾기 어렵고, 찾더라도 PDF 등 가공이 어려운 형태로 되어있어 이용 가능성이 낮음
- 지방통계지표 활용도 및 인지도를 바탕으로 선별한 총 7개의 (e-지방지표, e-나라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시스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지방재정365', 행정안전통계, 내고장알리미)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 8일 부터 19일 까지 12일간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전문가 30인에게 신뢰성·접근성·지표활용도가 가장 높은 통계플랫폼 부터 1~3순위를 매기도록 함
-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통계플랫폼은 'e-지방지표'인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이 관리하는 통계플랫폼인 'e-지방지표', 'e-나라지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통계 플랫폼인 '지방재정365'가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음
- 반면 대부분의 자료가 웹사이트 상으로 제공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행정안전통계' 등은 하위권을 기록하였음
- 전문가들은 ①통계지표 신뢰성과 시의성 간의 trade-off 관계, ②통계 생산주체의 신뢰성 고려, ③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직접 방문 데이터 활용 경험, ④시군 단위까지 가공 가능한 수준의 자료의 제한성, ⑤통계지표의 일원화된 서비스 방안 강구 필요성 등을 지적함

통계 지표 제공 범위

- 통계지표 제공 범위는 ① 시도, ② 시군구, ③ 읍면동, ④ 통리반, ⑤ 국가·지방총괄, ⑥ 시도·시군구 특정불가능, ⑦ 읍면동 특정불가능, ⑧ 특정 시도, ⑨ 특정 시군구, ⑩ 특정읍면동으로 구별함
- 전체에서 ① 시도 유형이 160개 지표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44.6%), 시군구가 특정되는 비중은 ②, ③, ④ 유형을 합쳤을 때 90개 지표(25.1%)로 시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읍면동이 특정되는 유형은 19개지표(5.3%)로 낮은 수준이었음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용어

- 지표 수집 시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을 특정할수 있음에도 가공되지 않은 채로 처리되어 공개되는 유형인 ⑤, ⑥, ⑦ 유형은 전체적으로 지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있으며, 전체 지표 중 11.9%를 차지함

• 지방행정 관련 통계지표 현황 : 지표 제공 범위 •

분류	제공범위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합계
현재 생산되고 있는 지표	① 시도	45 (45.0%)	100 (45.5%)	15 (38.5%)	160 (44.6%)
	② 시군구("시도, 시군구" 포함)	36 (36.0%)	29 (13.2%)	5 (12.8%)	70 (19.5%)
	③ 읍면동("시도, 읍면동", "시군구, 읍면동" 포함)	0 (0.0%)	12 (5.5%)	7 (17.9%)	19 (5.3%)
	④ 통리반	0 (0.0%)	0 (0.0%)	1 (2.6%)	1 (0.3%)
지표가 생산되고 있으나 자치단체 특정 불가능 (지표 비효율성 초래)	⑤ 국가-지방총괄	0 (0.0%)	4 (1.8%)	3 (7.7%)	7 (1.9%)
	⑥ 시도·시군구 특정불가능	1 (1.0%)	34 (15.5%)	0 (0.0%)	35 (9.7%)
	⑦ 읍면동 특정불가능	0 (0.0%)	1 (0.5%)	0 (0.0%)	1 (0.3%)
특정 자치단체에서만 생산되는 지표	⑧ 특정 시도	4 (4.0%)	17 (7.7%)	3 (7.7%)	24 (6.7%)
	⑨ 특정 시군구	14 (14.0%)	21 (9.5%)	5 (12.8%)	40 (11.1%)
	⑩ 특정 읍면동	0 (0.0%)	2 (0.9%)	0 (0.0%)	2 (0.6%)
합 계		100 (100%)	220 (100%)	39 (100%)	359 (100%)

통계 지표 제공 유형

- 통계지표 자료 제공 유형은 ①EXCEL, CSV 등 가공 가능한 형태의 자료 제공, ②HWP 형태의 자료 제공(PDF 형태의 파일 함께 제공 포함), ③ PDF 단독 제공, ④웹사이트 상에서 단독 제공으로 구분되었음
- 자치입법권의 경우, EXCEL, CSV 등 가공 가능한 형태의 자료 제공율이 53.0%로 자치조직권(79.1%), 자치행정권(84.6%)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PDF 단독 제공 혹은 웹사이트 상에서 단독 제공하는 비중 역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편이었음
- 통계청은 약 90% 정도 가공이 가능한 형태의 통계지표를 제공하는 반면, 행정안전부는 72.7% 밖에 되지 않았음. 또한 PDF 단독 제공의 경우에도 행정안전부(20.5%)와 기타 플랫폼의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행정 관련 통계지표 현황 : 지표 제공 유형 •

자료 제공 유형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합계
EXCEL, CSV 등 가공 가능한 형태의 자료 제공	53 (53.0%)	174 (79.1%)	33 (84.6%)	260 (72.4%)
HWP 형태의 자료 제공 (PDF 형태의 파일 함께 제공 포함)	15 (15.0%)	16 (7.3%)	2 (5.1%)	33 (9.2%)
PDF 단독 제공	27 (27.0%)	22 (10.0%)	4 (10.3%)	53 (14.8%)
웹사이트 상에서 단독 제공	5 (5.0%)	8 (3.6%)	0 (0.0%)	13 (3.6%)
합 계	100 (100.0%)	220 (100.0%)	39 (100.0%)	359 (100.0%)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용어

승인 통계

- 승인통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통계법」 제 18조에 의하여 지정된 통계작성지정기관에서 작성한 통계로 신뢰성이 높으며,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 구분됨
- 지정통계(「통계법」 제3조 제2호, 「통계법」 제17조)는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통계작성기관의 신청에 따라 통계법 제 17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통계임(통계청, 2022)
- 현황 분석 결과, 승인통계는 총 359개 지표 중 158개(44.0%)로 그 중 일반통계가 136개(37.9%), 지정통계가 22개(6.1%)로 나타남
- 승인통계의 비중이 가장 낮은 분야는 자치입법권(14개, 14.0%)이었으며, 가장 높은 분야는 자치조직권(134개, 60.9%)이 해당함

• 지방행정 관련 통계지표 현황 : 승인통계, 일반통계, 지정통계 현황 •

분류	승인통계		비승인통계	확인되지 않음	합계
	일반통계	지정통계			
자치입법권	14 (14.0%)	0 (0.0%)	86 (86.0%)	0 (0.0%)	100
자치조직권	112 (50.9%)	22 (10.0%)	70 (31.8%)	16 (7.2%)	220
자치행정권	10 (25.6%)	0 (0.0%)	29 (74.4%)	0 (0.0%)	39
합 계	136 (37.9%)	22 (6.1%)	185 (51.5%)	16 (4.5%)	359

03.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제도 통계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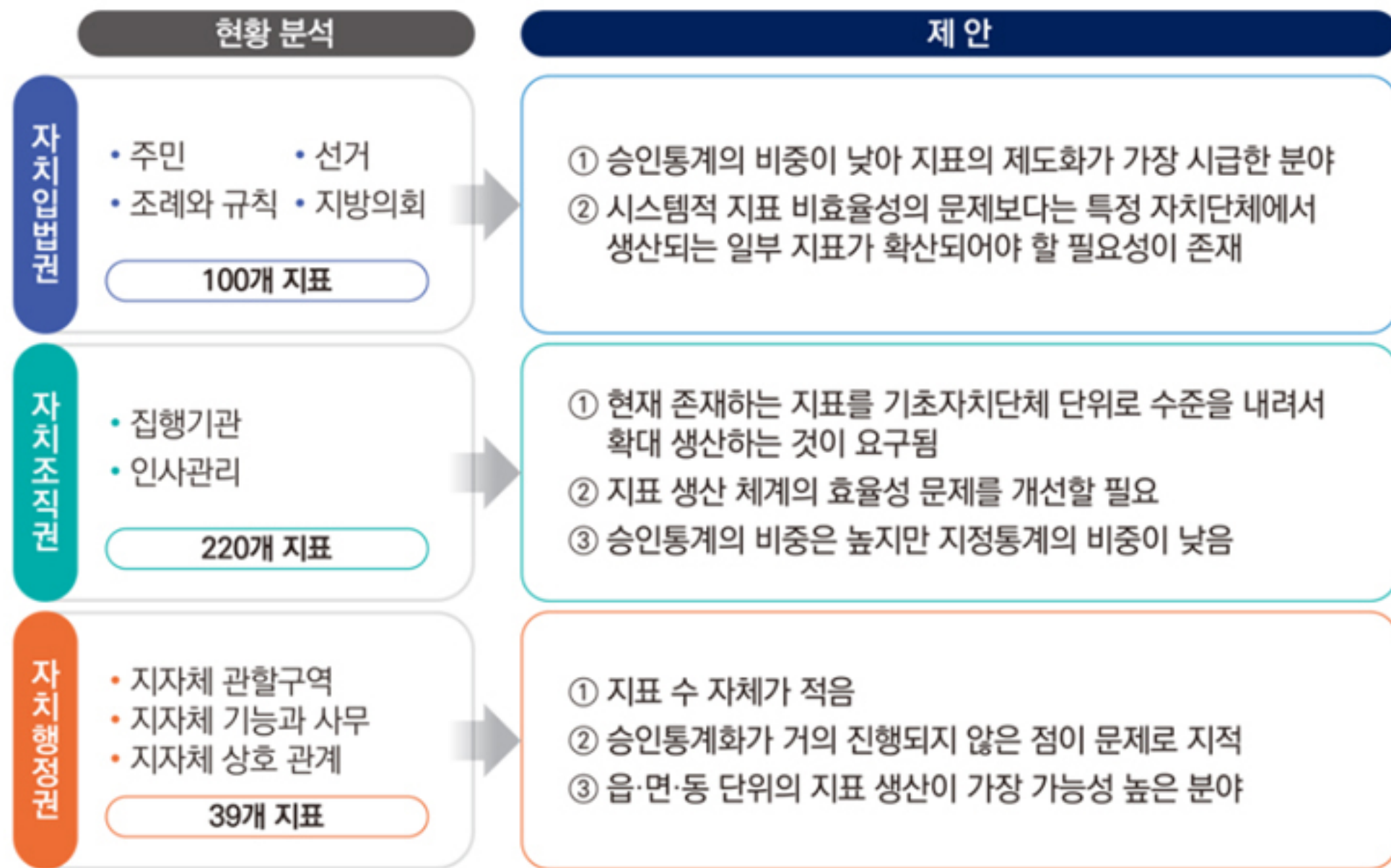
전반적 개선방안

- 전반적으로, ①지표의 양적부족, ②지표 체계의 효율성 부족, ③지표 제공 유형에 따른 편의성 부족, ④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지표 제공, ⑤자치입법권 분야의 승인 통계 부족 및 지표 가공 가능성 부족 등이 문제로 드러남
- 향후 지방행정 및 자치 분권 통계 체계 관련하여 ①자치입법권 및 자치행정권 관련 지표의 추가 개발, ②지표 제공 유형 및 범위의 개선을 통한 지표체계 비효율성 개선, ③신뢰성과 시의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승인통계 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됨

분야별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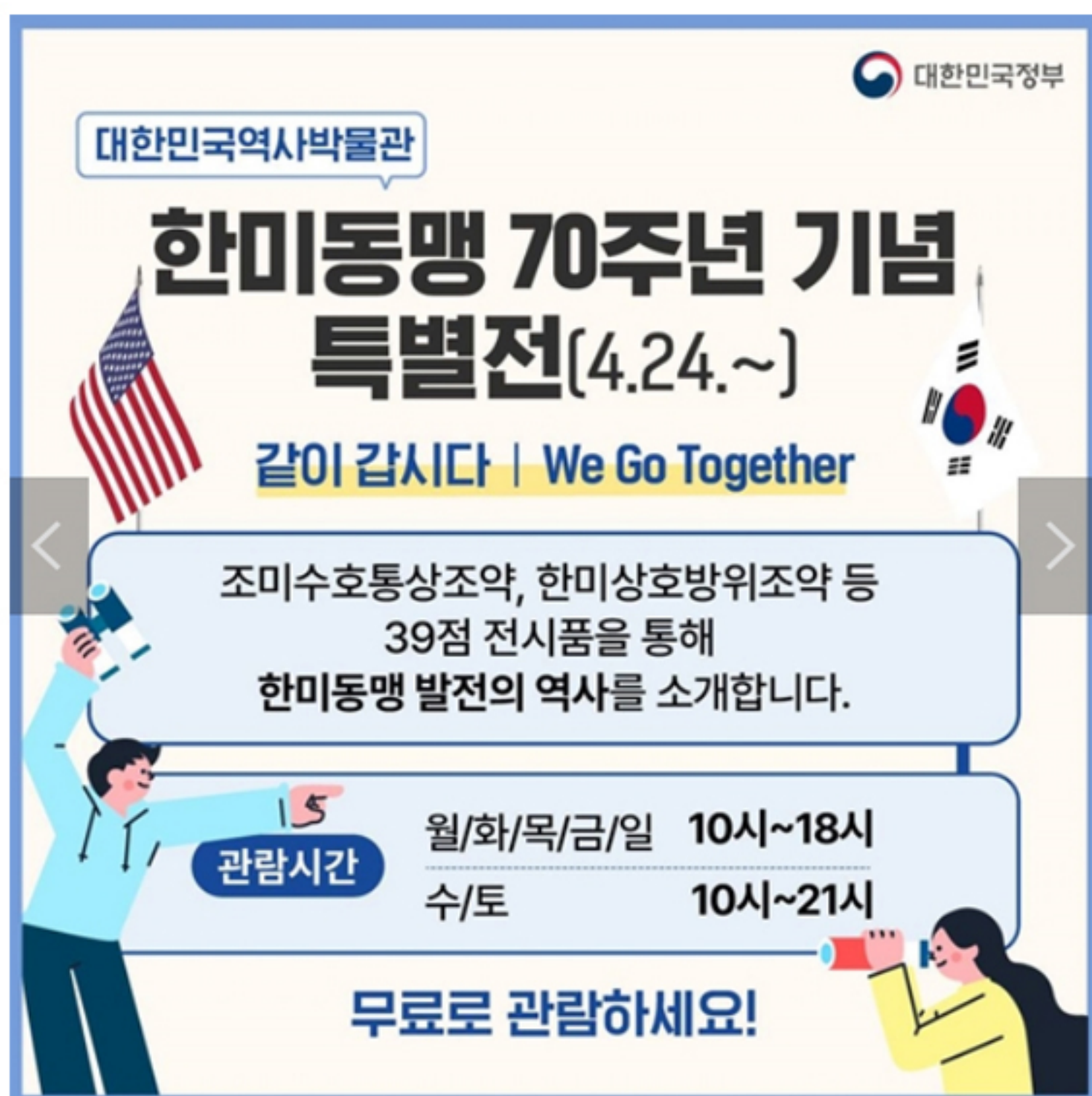
-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전문가 30인에게 각 분야별 통계 개선방안을 자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자치입법권
 - ①승인통계의 비중이 낮아 지표의 제도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이며, ②시스템적 지표 비효율성의 문제보다는 특정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일부 지표가 확산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 전문가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 자치입법권의 신뢰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으므로 주민소환, 주민 소송 등에 대한 지표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자치조직권
 - ① 현재 존재하는 지표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수준을 내려서 확대 생산하는 것이 요구되며, ② 현재 지표가 생산되고 있지만 자치단체가 특정 불가능한 지표도 많기 때문에 지표 생산 체계의 효율성 문제를 개선해야 하며, ③ 승인통계의 비중은 높지만 지정통계의 비중이 낮다는 문제가 지적됨
- 자치행정권
 - ①지표 수 자체가 적고, ②승인통계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③읍·면·동 단위 지표 생산이 가장 가능성 높은 분야로 판단됨
 - 전문가들은 자치행정권 중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관련 지표 신뢰성·접근성·지표활용도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행정협의회 관련 지표의 접근성과 지표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하였음

• 각 분야별 지방통계지표 현황 분석에 대한 제언 •



출처 : 김 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알기쉬운 정책용어



알기쉬운 정책용어

대한민국정부

4월 17일~5월 31일

기업·근로자 여행경비 적립 시 정부가 휴가비 10만 원 추가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근로자 추가 모집



신 청

기업 단위로 온라인 신청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vacation.visitkorea.or.kr

문 의 | 전담 지원센터 ☎ 1670-1330

대한민국정부

최대 330만원

일하는 저소득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5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홈택스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자여부 조회

얼마 받는지 궁금하다면?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계산해보기

문의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알기쉬운 정책용어

대한민국정부

음주운전·어린이 보호구역
특별·집중 단속

음주운전 특별 단속 (~5월 31일)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단속

보행자 보호 또는 신호 위반 등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음주
단속중

대한민국정부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수칙 꼭 지켜주세요!**

☒ 안전모 착용 필수
☒ 운전면허 필수
☒ 1인 탑승 필수(2인 탑승 금지)
☒ 제한속도 준수(25km/h)
☒ 음주 운행 절대 금지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의 끝차선 이용

25km

알기쉬운 정책용어

신고 창구 일원화

대한민국정부

불법 숙박업소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미신고 숙박업 운영

- 침대·욕실 설치해 운영하는 룸카페·파티룸
- 숙박 플랫폼 통해 오피스텔·아파트 등 불법 영업

불법 확대 영업

- 일부 건물만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한 후 영업 등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safetyreport.go.kr)에서
신고하기 > 생활불편 > 불법숙박

대한민국정부

어린이용 킥보드 구매하려 하신다면?

소비자24

에서

가성비 좋은 제품 알려드려요!

어린이용 킥보드 보유율이 높은
10개 제품의 가격·품질 비교

안전성

내구성

부가기능

가격

출처: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알기쉬운 정책용어

대한민국정부

아동·청소년 디지털 지우개(잊힐 권리) 시범사업

만 18세 이전에 게시한

인터넷 글·사진·영상

삭제&검색 안 되게 해드려요

신청자격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신청방법

개인정보포털 privacy.go.kr 에서 신청

메인화면 > 개인서비스 > 지우개(잊힐 권리) 신청

문의

지우개 서비스 담당자 ☎ 02-2135-8362

대한민국정부

돌보미가 중증 장애아동 가정에서

학습, 놀이, 외출 등 지원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연 960시간 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3인가구: 532.2만원 / 4인가구: 648.2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시

시간당 4,740원(연 960시간 범위 내) 부담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

알기쉬운 정책용어

대한민국정부

불법 반려동물 영업 처벌·제재 강화

5백만 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4월 27일 ~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 반려동물 수입·판매 시 별도 허가 필요
- ✓ 맹견의 출입금지 구역 확대
- ✓ 반려동물 사고예방을 위한 소유자 의무 강화 등

대한민국정부

양육비를 받지 못하셨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 서비스

지원 내용

- ✓ 양육비 관련 전문상담
-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 추심지원 및 불이행 제재조치
- ✓ 양육비 청구 소송 등 법률지원
- ✓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상담·문의는

🔍 누리집

☎ 전화

www.childsupport.or.kr

1644-6621